

다산포럼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웅솟을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 커다란 북을 만들어 쳐서 메고는 /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1930년 3월 1일, '상록수'의 저자 심훈은 언제 다가올지 모를 해방을 이렇게 노래했다. 요즘 이 시를 자주 읊으면서 선진들이 갈구했던 그 광복된 한반도를

‘광복 75년’, 분단 구조가 ‘광복’일 수 없다

그러 본다. 지금도 1945년 8월 해방을 맞던 때, 마치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듯, 해방의 날을 감격해하던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시골 신사 마당에 모여 신사를 불태우고 환호적하던 그 모습을 회상하는 내 가슴이 오히려 타질 듯하다.

'백범일지'에는, 더덩실 춤추며 맞았던 민초들과는 달리,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해방에 당황해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백범은 1945년 8월 초, 광복군의 훈련 광경을 보기 위해 시안(西安)을 찾았다. 광복군의 마지막 훈련을 참관하며 만족했다. 이들은 곧 미국 잠수함 등으로 한반도에 몰래 들어가 각종 공작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달 10일 밤 백범은 산시성(陝西省) 주석 추소주(蕭昭周)의 초청연에서 '외적이 항복한다'는 충칭(重慶)발 소식을 듣는다. 백범에게는 일제 패망이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준비한 참전 준비가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백범 만큼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분이 없었지

만, 일본의 항복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일까.

임시정부는 27년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 '건국강령'을 다듬고 다당제와 정당정치(政黨政治)를 실시하고 의회·정부·군대를 두고 근대국가를 실험했다. 1943년에는 장개석(蔣介石)을 통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외교도 펼쳤지만, 막상 일본이 항복했을 때를 대비하지는 못했다. 미군의 입정반대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다. 해방을 전후하여 여운형의 건국동맹과 건준이 있었지만, 미군 주둔에 맥없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에서 여운형-김규식의 중도 노선이 이승만-김구의 우파와 박헌영 등의 좌파를 포용하여 분단 극복의 중심 세력이 될 수는 없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 좌우 갈등과 테러가 빈번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70년 전 6·25가 터졌고, 동족상잔에 외국군까지 참여, 오늘날의 분단 구조를 만들었다. 남북이 서로를 향해 증오심을 심화·확대할수록 더 대접받는 기이한 구조 속에서, 적대 의식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화할수록 친일 정산은 힘이 빠진다.

해방 직후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오늘의 현실로 구체화될 줄은 몰랐다. 소련이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마일은 우리의 독립과는 긴장 관계에 있다. 해방 후 1년 수개월을 제외하고는 미군이 전작권을 쥐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을 '광복 75년'이라 말한다. 미국은 이제 주둔군 비용도 떠맡으라고 강박한다. 이게 선일들이 꿈꾸었던 광복인가.

'광복 75년', 분단 구조로 점멸받이가 된 광복을 언제까지 후손들에 물려줘야 하나. 이게 독립투사들이 지향했던 광복이 아니라면, 남북은 역사 앞에 정직하게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 핵과 외군 철수, 남북 군축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대전 못지않게 큰 변혁이 예상된다. 이 기회에 병력·화력이 밀집되어 있는 한반도를 평화·협력 지대로 전환시켜 '완전 자주 통일 독립'의 '광복'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길이다.

社說

코로나 비상 속 의료계 대화 물꼬는 텃지만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전협은 그제 면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제약(製藥)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전면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때 이날 만남에서 코로나의 전국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전공의들이 진료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우려됐던 최악의 의료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대전협은 "단체행동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어제 전

임의(專任醫)들이 파업을 시작할 데 이어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 의사들까지 가세할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총 총리는 어제 의협과도 만나 머리를 맞댔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났다. 양측은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진료 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 온 K-방역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학 호남진흥원’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호남학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에 설립된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 다음 달이면 재단 설립 3주년을 맞게 된다. 호남진흥원은 그동안 본격적인 호남학 자료 발굴과 조사, 학술 연구와 자료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멸실 위기의 고문서 및 고문헌을 발굴 수집 정리하고 호남 관련 고전 문헌 국역 편찬도 주도해 왔다.

특히 근대 문집 7종 4책을 비롯해 '현주집' '서암일기' 등 8종 16책을 간행했으며, 옛 문집과 일기 등을 국역 보급함으로써 호남의 사상 문화를 재조명하는 데 일조했다. 개원 이후 1만7859 점의 기록 유산을 수집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기록 자료까지 포함하면 2만5232점이 소장고에 보관돼 있다. 이처럼 기초 자료 수집에 힘쓰면서 학술대회도 네 차례나 개최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등 연구 여건이 열악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이는 경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국학진흥원)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드러난다. 연구 인력은 호남진흥원이 8명으로 15명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국비 지원도 호남진흥원이 15억 원, 국학진흥원은 160억 원이다. 올해 호남진흥원의 전체 예산(51억 원) 역시 국학진흥원(327억 원)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설립 24주년을 맞은 국학진흥원과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남진흥원의 예산 및 인력 현황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호남 고유의 수준 높은 시문학과 농경문화 등 호남학의 총체적인 연구와 기록유산 집대성 및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보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호남학 연구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호남진흥원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NGO칼럼

광주천 가동보 추가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나 동한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민선 7기 공약 과제였던 '양동시장 북개구간 생태하천 복원'이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광주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광주천 수량 확보를 위한 제4 수원지 및 지하수 활용과 가동보 신설,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여과시설 개설, 기존 고정보 퇴적물 제거와 가동보로의 교체, 생태 복원 및 친수 공간 조성 등을 위한 광주천 하부 정비, 문화공간 조성, 생태학습관 건립 등이다. 2022년까지 총 380억 원을 투입해 광주천의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친수 시설 조성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

려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물 순환 선도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광주천 아리랑 물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과거의 하천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과잉인 정감다나리 친수시설 등 편의성 시설의 비중이 높다.

특히 이번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 중 광주천과 서방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인근에는 수원 유지용 가동보 추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하천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천 내 횡구조물은 하천 환경에 부정적이다. 대전광역시 도심의 유등천도 가동보를 설치하면서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 결국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도 추진하지만, 물을 막는 구조물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발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고 모래톱과 여울, 소 등의 하천 고유물의 유로가 회복되면 자정 능력이 강화되어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경관도 개선될 것이다.

이미 광주천에는 평균 450m여 간격으로 횡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정감다리와 다리까지 포함하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십 개의 구조물이 광주천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낙차공 및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나, 보 설치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물을 가두는 것인 만큼 물의 정체와 하천의 단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광주시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이 생태 하천 복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광주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친수 하천으로 만들고, 시민이 소통하고 즐겨 찾는 공간

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광주시민이 원하는 광주천은 물 많은 하천보다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 맑은 하천일 것이다. 광주천이 자연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연의 공간이 된다면, 편의시설이 아니라 자연을 느끼기 위해 시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직강화(直江化)되고 좁혀진 하천, 북개구간 및 폐천 등 우리 하천의 현재 모습은 환경적으로도 초라할 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 대처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 홍수 피해로 확인했다. 광주천 환경 정비가 수질과 생태, 재해 대책, 물 이용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광주천 분류만이 아니라 폐천된 지류를 포함한 지천, 물 순환, 하수관거 정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연성 회복은 하천 사업의 범위와 과업 기간을 넓고 길게 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번 홍수 때 필수적인 시설물들을 반복해서 재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시민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것은 아예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 계획상의 가동보 추가 신설은 철회해야 한다.

기 고

‘숲속의 전남’, ‘K-포레스트’ 전략과 연계해야



윤 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의 경제 사회 구조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란 용어가 일상이 돼 버렸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등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는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전환시키겠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기반 위에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160조 원을 투입,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 뉴딜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다.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에 16대 중점 과제를 담은 'K-포레스트'(Forest, 숲) 추진 전략이 그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대형 산불, 기후 변화로 생태계의 불안정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사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산림이 훼손될수록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 간다"고 우려하고 있다. 갈수록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는 의미.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산림 휴양, 치유, 현지 실습, 교육 등 대면 산림 서비스 공급이 중단돼 쉽게 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 원격, 재택 근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K-포레스트' 전략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 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 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산림복지-웰스케이'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산림형 일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숲으로 나아가는 산림살이'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90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50만 명의 도시권 숲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산림 교육을 실시하고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전문입업인은 물론 일시적 실업자들도 산림형 일자리를 얻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불안, 분노, 우울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에 의지해 면역력을 높이고 숲 치료 요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어 숲가꾸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산림청은 남북 관계 개선 사업의 하나로 북한의 숲까지 아우르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 공간을 구축하는 로드맵이다. 숲에서 배우고, 숲을 만들어 함께하는 국민 운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공공 사업 모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업에 숲의 면역력을 활용한 바이오 생명산업, 관광, 디지털과 비대면을 입산업에 접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산업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산림형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를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도는 이미 민선 6기부터 전남을 거대한 공원처럼 숲으로 조성하는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를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 10년 동안 5300억 원을 투입해 3만 1000ha의 숲을 조성하고 1억 그루 나무를 산지뿐만 아니라 평지인 유휴지 등 어디든지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다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그 호흡을 갖고 민관 협력을 통해 숲을 가꾸고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정원 및 숲 조성 사업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올 상반기까지 6500만 그루를 전남 곳곳에 심어 계획 대비 65%를 달성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는 산림청의 한국형 산림 뉴딜사업인 'K-포레스트'의 사전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남도가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전남형 산림 뉴딜 사업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면 한다. 예를 들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산업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거나 서남해안 기업도시 내 친환경 정원산업 육성, 미세먼지가 차단 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이미 밀그램이 그려진 해안 등 숲 속 복원 사업 역시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한국판 산림 뉴딜 사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無等鼓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겪은 일이다. 한참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은 이가 전화 통화를 했다. 그 역시 식사 도중에 전화를 받았으니 당연히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큰소리로 거리낌 없이 통화를 했는데, 입을 손으로 가리는 동작이나 식사를 하는 사람을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았다. 물론 식사 중에도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엄중함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그의 '배려 없는' 전화 예절은 상당 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요사이 코로나 관련 뉴스에 민폐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이를테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가 격리 중 주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만 걸치는 '노마스크'나 '턱스크', 고열과 기침 등 증세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경우 등이다.

꼭꼭 숨어 있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문제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재유행이 바로 여기에서 촉발돼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8월 15일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23만 2300여명(24일 현재)의 동의를 얻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24일 정오까지 176명을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다. 특정화 예절은 상당 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교회 신도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자를 매개로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자정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도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자신과 가족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이타적(利他的)인 행동이 요구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코로나 민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역(국문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